

한국금융학회 춘계정책심포지움 발표 자료 2015. 4. 9.

금융법제의 현안과 과제

고 동 원

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
I. 검토 배경

(1) 우리 나라 금융의 ‘슬픈’ 현 주소

- * 세계경제포럼(WEF) **2014년 국가 경쟁력 보고서: ‘금융 시장 발전도’ 부문 순위 144개 국가 중 80위**(2008년 37위)
- * 우간다 81위, 말라위 79위, 필리핀 49위, 일본 16위, 대만 18위, 말레이시아 4위
- * 금융산업의 비중: 국내총생산의 5%에 불과
- * 금융산업은 강한 규제 산업: 그런데 ‘과도하고’ ‘비합리적인’ 규제가 상존
- * 금융 규제 개혁 필요-> 왜 안되는가?
- * 이원적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문제
- * ‘관치금융’과 ‘낙하산 인사’의 문제

(2)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 출범 이후 주요 금융사고

- * 2011년 상호저축은행 부실 사태
- * 2013년 동양 사태
- * 2014년 신용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태
- * 2014년 KB국민은행 사태

- * 크고 작은 금융사고의 빈발
- * 금융기관 수익력의 감소

(3) 금융법제의 기본 원칙

- * 법 원칙을 준수하면서 규제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
 - “합리적 규제”(reasonable regulation)
 - 금융 혁신
 -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
 - 금융산업의 발전

II. 금융법제의 현안과 과제

- * 1. 행정지도의 남발: '숨은' 규제
- * 2. 금융감독기구 체제 법제
- * 3. 금융기관 및 임직원 제재 절차 법제
- * 4. 금융소비자 보호 법제: 사후적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(금융 분쟁 조정 제도)의 개선 과제
- * 5. 거시건전성 감독 및 금융정보 공유 체계의 개선 과제
- * 6. 적기시정조치 유예 제도의 폐지
- * 7. 법령 및 감독규정 제개정 과정의 의견 수렴 절차 개선
- * 8. 예금보험기구의 지배구조 개선 과제
- * 9. 금융기관 경영지배구조 법제의 개선 과제
- * 10.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 관련 과제

1. 행정지도의 남발- ‘숨은 규제’

(1) 행정지도의 현황- 총 790건

- * 행정지도: “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임의적 협력에 기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청하는 지도, 권고, 지시, 협조 요청 등” [금융위원회(이하 “금융위”)의 “행정지도 운영규칙” 제2조, 행정절차법 제2조]
 - * 행정지도 현황: 총 790건 + α [금융위의 “금융규제 개혁 방안” 발표 자료(2014. 7. 10)]
 - * 행정지도의 남용 사례: 2014년 금융감독원(“금감원”)의 금융기관 민원 등급 영업점 게시 조치
- 법률에 정해야 할 사항을 행정지도로 한 사례임

*

(2) 행정지도의 문제점- 사실상의 강제성

- * 금융위의 “금융규제 개혁 방안” 자료(2014. 7. 10)에 의하면, “행정지도를 [금융기관]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고, 위반시 제재[조치]”를 취한다고 함 → 과연 “임의적 협력”인가? -> 사실상의 강제력을 가짐
- * 행정절차법 및 금융위의 “행정지도 운영규칙”에 위반
- * 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 및 행정지도 운영규칙 제3조 제1항: “... 행정지도를 받은 금융회사등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”
- * 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 및 행정지도 운영규칙 제3조 제3항: “...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”)

(3) ‘법률 유보 원칙’에 위반한 행정지도

- * 행정지도 폐지에 앞장서겠다고 한 금융위 마저 “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”(2014. 12. 24)을 행정지도로 제정
-> 존속 기간도 없어 ‘행정지도 운영규칙’에도 위반(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: 제8조 제2항)
- * **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하는 다수의 행정지도 존재**: 의무, 금지 행위 등 전형적인 법률 사항을 행정지도로 규정
- * **법률 유보 원칙**: 국민 등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행정행위(侵益的 행정행위) 등 국민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원칙
- *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: “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”
- * 행정지도 심사를 하는 별도의 독립된 기구 설치

2. 금융감독기구 법제의 개선 과제

(1) 수직적으로 분리된 현행 금융감독 기구 체제의 문제

- * 금융위+금감원으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감독기구의 분리에 따른 문제
- * 금융감독기구가 수직적으로 분리된 국가를 찾아보기 어려움
 - 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”(이하 “금융위설치법”) 제18조: “금융위원회는 ... 금융감독원의 업무, 운영, 관리에 대한 지도, 감독을 하며...”
- * 수직적으로 분리된 금융감독기구 사이의 협조를 기대하기가 어려움
 - > 전형적인 감독의 비효율성 초래
- * 신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을 방문(2015. 3. 19): “金融改革 渾然一體” 액자 선물 → ‘혼연일체’가 될 수 없는 태생적 한계
- * “공적(公的)” 금융감독기구(공법상의 營造物法人)로의 통합 필요

(2) 감독 실패 사례

- * 2011년 상호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감독 실패 사례

- * 2013년 동양 사태 시의 감독 실패 사례

- 감사원의 국민감사 청구 결과 발표(2014.7)

-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통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사실을 금융위에 여러 차례 보고했음에도 금융위는 ‘금융투자업감독 규정’ 개정을 제때에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음을 지적

- > 바로 수직적인 이원적 감독기구의 문제점이 나타난 전형적인 사례임

- >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감독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

- > 두 기관이 혼연일체가 될 수 없는 한계(상하 관계인 두 기관이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가?)

(3) 공적 금융감독기구로 통합 필요

- * 금융감독 행정은 정부(중앙행정기관)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
- * 행정청의 범위에는 “행정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(私人)”도 포함됨(행정절차법 제2조)
- * 특별법이 ‘공법상의 영조물법인’을 창설하여 금융감독 권한을 부여한다면, 이는 ‘간접행정기관’으로서 금융감독 행정 업무(제재 처분 업무 포함)를 수행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음
- *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공적 금융감독 기구가 필요함
- * 대부분의 외국도 공적 금융감독기구를 설치하여 운영
- * 금융감독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순환 보직제 폐지하고 경력 전문가 수시 채용 체제로 변경

(4) ‘금융위원회 운영규칙’의 문제

- * 금융위설치법 제16조: “[금융위설치법]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” → ‘금융위원회 운영규칙’ 제정
- * 법적 근거 없이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조항들이 존재
 - 1) 금융정책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을 금융위 보고 사항으로 처리(제7조)
 - 2) 금융위원장 등에 대한 위임 조항(제15조 내지 제17조)
- * ‘법률 우위 원칙’의 위반-> 무효

(5) ‘법률 우위 원칙’의 위반 사례- 법령 제 개정 사항을 보고 사항으로 처리

- * 금융위설치법 제17조: “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 등에 관련된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”은 금융위의 소관 사무-> 즉 금융위의 심의 의결 사항
- * ‘금융위원회 운영규칙’ 제7조: “금융정책 및 제도 등에 관련된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은 보고 사항” → 즉 금융위원장이 결정하고 금융위에 보고로 처리
- * 금융감독규정(規程) 제개정 사항은 금융위의 심의 의결 사항으로 하면서, 더 중요한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에 대한 보고 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됨
- * 금융위 회의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라고 한 것이지, 심의 결 사항과 보고 사항을 자의적으로 구분하라고 한 것은 아닐 것임
- * 금융위원회가 합의제 의결 기구라는 성격을 무시한 것
- * 즉, 하위 규칙이 법률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‘법률 우위 원칙’의 위반으로 위법, 무효

(6) 규제 투명성 미흡 사례 - ‘무늬’만 공개인 금융위 의사록 공개

- * 금융위설치법 제12조 제2항(“금융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,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”)
- * ‘금융위원회 운영규칙’ 제11조 제3항(“속기록을 근거로 주요내용을 요약한 의사록을 작성한다”)
- * 운영규칙 제7조(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)
- * 그런데 공개 내용이 너무 간단하여 공개라고 볼 수 없을 정도임
 - > 어느 위원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음
- * **의사록의 공개 범위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**하고, 운영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 예외 사유도 법률에 규정할 필요 있음
 - > **위원 발언 내용 등 보다 자세한 내용 공개** 필요(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사례 참조)

(7) 금융위 의사록 예시(2015. 1. 14)

* 2005년 제1차 금융위원회 의사록(2015. 1. 14)

* “4. 회의경과

* 2) 의결안건 심의

* ☐ 의결안건 제1호 『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』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기획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

* ⇒ 원안 의결함

* ☐ 의결안건 제2호 『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』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내용을 설명함

* ⇒ 원안 의결함

* ☐ 의결안건 제3호 『○○○○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』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

* ⇒ 원안 의결함

* ☐ 의결안건 제4호 『(전남)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인가 취소 등 조치안』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

* ⇒ 원안 의결함

* ☐ 의결안건 제5호 『(주)인베스터유나이티드의 흥국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』, 제6호 『(부산)흥국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』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

* ⇒ 각각 원안 의결함

* ☐ 의결안건 제7호 『J-trust(주)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』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

* ⇒ 원안 의결함”

(8) 금융위의 지배구조 개선 과제

- * 현재 금융위는 9인 위원으로 구성: 위원장 + 부위원장 + 기재 부차관 등 4인 당연직 위원 + 상임 위원 2인 + 비상임 민간 위원 1인(금융위설치법 4조)
- * 비상임 위원 1인으로 경제계 등 민간 부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고, 금융 정책 결정 과정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에도 한계 ->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가 어려움
- * **당연직 위원 제도 폐지하고 민간 비상임 위원 수가 과반수** 되도록 확대 필요
- * **국회가 일부 위원 추천권 행사** 필요
- * **위원의 적극적 자격 요건도 보다 자세히 규정**함으로써 **전문성** 유지 필요(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참조, 법 제37조)-
현행은 결격 사유만 규정(금융위설치법 제8조)

3. 금융기관 및 임직원 제재 절차 법제의 개선 과제

(1) 금융기관 제재 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

- * 현재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기준과 절차는 법률이 아닌 감독규정, 즉 ‘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’(금융위 제정) 및 ‘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’(금감원 제정)에 정해져 있음

- 금감원의 ‘제재심의위원회’ 구성 등-법적 기구가 아닌 자문기구

- * 금융기관 및 임직원 제재 절차의 법적 근거 미비 - 법률 유보 원칙 위반
- * 제재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전형적인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엄격한 적법 절차가 요구되므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절실
- * (가칭) ‘금융기관 제재 절차에 관한 법률’ 제정 필요

(2) 제재 절차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

- * 모든 제재 조치 결정 절차에서 청문회(hearings) 제도 의무화 필요
 - 미국의 ‘행정청문주재관’(administrative law judge) 제도 도입 검토
- * 독립적인 기구인 별도의 “제재위원회” 설치 필요
 - 전원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
- * 제재 대상자에 대한 방어권 충분히 보장 필요 ->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
- * 제재 결정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 공개(의사록 공개 등)

4. 금융소비자 보호 법제의 개선 과제: 금융분쟁 조정 제도의 개선 방안

(1) 사후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금융분쟁 조정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

- * 금융 분쟁 해결에서 조정의 중요성-> 대표적인 소송 외의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(ADR)
- *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금융 분쟁의 경우 소송보다는 조정 절차가 더 효율적일 수 있음
- * 소송의 경우 비용, 시간이 많이 소요됨
- * 현재 금융 분쟁 조정 기구는 여러 기구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음 - 금감원, 한국소비자원,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, 한국금융투자협회,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, 우체금융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
- * 특히 금감원에 의한 금융 분쟁 조정은 감독기구라는 점에서 조정의 **공정성이 문제** 될 수 있음
- * **전문성 미흡** 문제
- * 조직과 인력의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
- * 조정 결과의 차이에 따른 **조정 기구의 신뢰성 저하** 문제

(2) 통합 금융분쟁 조정 기구 설립 필요

- * 금융분쟁 조정 기구의 통합, 여기에 중재 기능까지 부여
→ (가칭) **금융분쟁조정중재원** 설립
- * 금융감독기구의 산하 기구로 설치하되 운영의 독립성 보장 필요
- * 금융 분쟁 조정의 전문성, 신뢰성, 공정성 확보로 인한 금융 분쟁 해결 제도의 효율성 제고 가능

(3) 제한적 조정 전치주의 제도 도입

- * 소액 사건(소액사건심판법 대상인 2천만원 이하 사건)의 경우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치게 하는 제도 도입 필요
- * 소액 사건에만 한정하므로 헌법상의 재판청구권(제27조) 침해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임
- * 약자인 금융 소비자 보호 목적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임(헌법 제37조: 국민의 기본권은 “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” 가능)

(4) 일방적(편면적) 구속력 조정 제도 도입

- * 현행 제도상 일방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음
- * 개선 방안: 소액 사건(소액사건심판법 대상인 2천만 원 이하 사건)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금융기관이 구속받도록 하는 제도 도입
 - 영국 및 호주의 사례 참조
- * 소액 사건에 한하므로 헌법상의 재판청구권(제27조) 침해라는 위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임
- * 약자인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에 비추어 보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임

5. 거시건전성 감독과 금융정보 공유 체계 개선 과제

(1) 거시건전성 감독 총괄 기구(‘금융안정협의회’)의 설치 필요

- *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 규제의 중요성 대두
- * 거시건전성 감독을 총괄할 ‘(가칭)금융안정협의회’ 신설 필요
- * 기획재정부(“기재부”), 금융위, 한국은행(“한은”), 금감원, 예금보험공사(“예보”)로 구성(의장은 기재부장관)
- * 조사 연구 기능은 한은에 설치
- * 미국의 ‘금융안정감시협의회’ (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: FSOC) 사례 참조
- * 금융정보 공유 체계 구축 관리 운영 기능 부여

(2) 금융정보 공유 체계 개선 방안

- * 금융위설치법 제65조 및 한국은행법 제94조는 기재부, 금융위 및 금융통화위원회 상호 사이에 자료 협조 요청 근거를 두고 있음
- * 금감원과 예보는 제외되어 있음
- * “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” 자료 요청에 응하도록 되어 있어, 완전한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음
- * 다만, 기재부, 금융위, 금감원, 한은, 예보 사이에 양해협의를 (MOU)(2009.9)에 의거하여 상호 정보 공유
- * 그러나 양해협의를 강제력이 없음
- * **금융정보 공유 기구의 법적 기구화** 필요 - (가칭)‘금융안정협의회’가 이 역할을 담당하게 함
- * 모든 금융정보를 이 기구에 모은 후에 이 기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는 체계로 효율성 도모

6. 적기시정조치 유예 제도의 폐지

- *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(“금융위원회는 [적기시정조치]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”)
- * 적기시정조치 유예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부실의 심화
- * 2000년대 초 적기시정조치 유예에 따른 현대투자신탁증권의 부실 확대- 투자자 피해 확대
- * 적기시정조치 유예 제도의 폐지 필요-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최소화 목적

7. 법령 및 감독규정 제개정 시 의견 수렴 절차 개선

- * 법령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) 및 감독규정의 제정, 개정, 폐지하는 경우의 의견 수렴 절차 개선 필요
- * 현재는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만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(행정절차법 제44조 제4항; ‘금융위원회 규정 제. 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’ 제5조 제1항)
- * 제출된 의견 내용을 금융위(금감원) 홈페이지에 공개하고, 그 처리 결과(의견에 대한 답변 내용)도 공개하는 제도 도입 필요
->규제의 투명성 확보
- * 미국 증권거래위원회(SEC)의 사례 참조: “Petitions for Rulemaking”

8. 예금보험기구의 지배구조 법제

(1) 예금보험공사의 지배구조 현황

- * 예금자보호법상의 예보의 임원 구성과 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’(“공공기관운영법”)상의 임원 구성 내용이 다름
- * 예보는 예금보험기금을 관리하므로 공공기관운영법상 ‘기금형 준정부기관’에 해당함
- * 예금자보호법상은 임원은 7인 이내(사장 1인, 부사장 1인, 4인 이내의 이사, 감사 1인)(제11조)
- * 반면에 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’상은 14인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(제18조)되며,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(제24조)
- * 문제는 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’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(제2조)

(2) 예금보험공사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

- * 예금자보호법상 예보에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예금보험위원회가 있는데, 별도의 이사회를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
- * 이사회에 비상임이사를 둘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임- 이사회 심의 의결 사항에 외부 인사가 견제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는지 의문
- * 예금보험공사의 특성을 감안한 지배구조 마련이 타당함
- * 특별법인 **예금자보호법이 우선 적용**되는 것이 타당함
- * 더 나아가, 예금보험위원회와 이사회의 기능 중복 부분이 있으므로(예보 정관 변경, 예보의 예산 편성과 변경, 결산 승인 건) **이사회 제도 폐지**하고 예금보험위원회를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하여야 함

9. 금융기관 경영지배구조의 개선 과제

(1) 행정지도로 경영지배구조를 규율하려는 금융위의 문제

* 금융위의 “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”(2014. 12. 24)을 행정지도로 제정 시행

→ 법률에 규정해야 할 사항들임(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사항임)

→ **법률 유보 원칙의 위반**

* 금융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‘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’ 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하나, 제정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했지, 법 기본원칙을 위반하면서 시행하는 것은 문제

(2) 금융기관 경영지배구조의 현황과 문제

- * 최고 경영자(CEO) 선임 과정에서의 ‘낙하산 인사’ 문제
 - 2014년 KB국민은행 사태,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낙하산 인사
 - > KB국민은행의 영업력 감소
- * 사외이사의 문제
- * 전문성이 부족
- * 독립성이 부족 – 경영진이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영향력 행사

(3) 금융기관 경영지배구조의 개선 방안

- * 낙하산 인사 방지 대책

- 1) “최고경영자(CEO)추천위원회” 설치의 법제화
- 2) 최고경영자 적극적 자격 요건으로서 해당 금융업종 분야의 경력 5년 이상 의무화

- * 상임감사위원의 자격 요건도 해당 금융업종 분야 경력 5년 이상 의무화 하여 정부나 감독기관 출신이 ‘낙하산 인사’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

- *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 방안

-> 전문성 요건을 보다 자세히 규정(현행 “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질 것”이라는 추상적 요건으로는 한계)

- *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방안

-> 제3의 후보 추천기관을 통한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법제화-> 추천 과정에서 경영진의 영향력을 배제

10.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 관련 과제

(1) 비대면 실명 확인 허용 필요

- * 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’(“금융실명법”) 제3조 제1항은 “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(이하 "실명"이라 한다)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” 라고 되어 있지, 명시적으로 대면 확인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음
 - 일반적으로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 확인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, 엄밀히 말하면 법령상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, 금융당국(구 재정경제부, 현재 금융위)의 유권해석에 따라 대면 실명 확인이 요구되는 것임
- * 따라서 유권해석 변경에 의해 비대면 실명 확인 허용이 가능함
- *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효율성 도모할 수 없음
- * 외국의 경우도 비대면 실명 확인 허용(미국의 경우 서류에 의한 실명 확인)

(2) '금산분리 원칙' 허물어선 안돼

- * 비금융기업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허용 시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 있음(사금고화 등의 문제)
- * 대주주인 비금융기업이 부실화 될 때, 은행의 부실화 가능성 심화될 수 있음 → 금융 체제의 불안으로 연결
- * 아직도 '편법'이 이루어지고, 투명성이 미흡한 기업 행태상 감독당국의 완벽한 감시는 어려움 → 2011년 상호저축은행 부실 사태에서 목격한 바 있음(우회적인 신용공여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위반 사례)
- * 특히 감독 부실의 문제가 항상 제기되고 있는 현재와 같은 금융감독 기구 체제에서 완벽한 감독은 어려움
- * 비금융기업의 4% 이하 지분 참여로 충분(은행법상 산업자본의 전국은행(시중은행)에 대한 소유 한도, 은행법 제16조의2)
- *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회사 설립 방안 검토 가능

III. 맺음말

- * 관(官)을 배제하고 업계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**대통령 직속 기구의 '금융개혁위원회'**를 설치하자
- * **금융 개혁과 미래의 금융산업 청사진** 제시
- * 호주의 성공 사례 참조
 - 캠벨(Campbell)위원회(1979):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산업 발전 방안 마련
 - 월리스(Wallis)위원회(1996): 현행 쌍봉형 금융감독기구 체제 방안 마련
 - 머레이(Murray)위원회(2013)(5인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): 고령화 시대 대비 및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금융제도 개편 방안 마련 목적